

소득성장 대신 경제활력 전면배치...경제정책 우클릭

홍남기 "내년 최저임금 영향 우려...경제활력 제고에 역량 집중"
정부 16개 중점과제중 10개 혁신성장·규제개혁·투자 활성화

3년차 文정부 방향키 바뀌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법부처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 최소화 대책을 추가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0.9% 오르는 것과 관련, 인상 여파를 줄일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제팀에서도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해서는 속도를 내면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성장률이 2.6%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성장률 전망치에는) 정부가 경제 체질을 개선해 내년도에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제활력 제고'가 내년 정부의 정책방향 전면 포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의 변화가 예고된다. 문재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세 차례의 경제정책방향은 소득주도성장 등을 전면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 중심 경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앞으로는 투자·혁신·구조개혁 등에 더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어려움이 그만큼 심각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을 동원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용이 장기간 악화한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자극해 산업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16개 주요 과제에서도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 10개 과제는 혁신성장, 규제개혁, 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재정을 활용한 경기 부양 등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주도성장과 밀접한 항목은 상대적으로 적은 4개였다.

고용에 관해서는 임금 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형 고용안정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양정보다 혁신에 조금 더 역점을 찍은 과제를 내놓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홍 부총리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 8천억원이 확보돼 있고, 지원기준이나 폭도 많이 조정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세제(EITC) 예산이 3배 늘어 그 부담을 덜어주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모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저임금 영향이나 영세자영업자 지원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 방향의 방점이 경제활력 제고에 쏠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외쳐 온 정부 정책 기조가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투자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에 일차적인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취지의 정책 의지"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축이 모두 매우 중요한 아젠다"라며 "내년도 소득주도성장 사업에 대

문대통령 지지도 48.5%...20대 男 29.4% '최저'

리얼미터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세를 전환하며 40% 후반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1.0%포인트 내린 48.5%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국정 수행을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포인트 오른 46.8%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7%포인트로 좁혀졌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20대 남성의 문 대통령 지지도가 29.4%로, 모든 연령대별 남녀 계층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부정평가는 64.1%로 가장 높았다.

반면, 20대 여성의 문 대통령 지지도는 63.5%로, 40대 여성(61.2%), 40대 남성(60.4%)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별 남녀 계층 중에서 가장 높았다.

리얼미터는 "그동안 20대 전체를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간주해왔으나, 20대 중에서 남성은 더는 핵심 지지층이 아니며 현재는 오히려 핵심 반대층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결과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과

청년세대의 남성과 여성 간 혐오, 즉 성(性)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37.0%를 기록, 2017년 1월 4주차(34.5%) 이후 가장 낮은 지지도로 떨어졌다. 자유한국당도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4.1%를 나타냈다. 정의당은 0.2%포인트 오른 8.7%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은 1.1%포인트 상승한 7.0%로 5주 만에 7%대를 회복했다. 민주평화당은 전주와 같은 2.3%로 조사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 내년 SOC 국비 1조 2121억...여수박람회 이후 최대

3년 연속 1조원 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남도는 내년도 국비 예산 가운데 사회간접자본분야(SOC) 분야 예산이 1조2121억원으로, 여수세계박람회(2012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액(6조 8104억 원)의 17.8%를 차지하는 규모로, 3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2018년 예산액(1조 416억 원)보다 1705억 원(16.4%)이 늘었고, 애초 정부 반영액에 비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 증액 된 것이다.

이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7월 당선자 시절부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한데 이어 취임 이후 국회 예산 확정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 예결위위원회 등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SOC 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고용 창출, 소득 증대, 지역균형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전남지역 SOC 사업 중 최대 성과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2800m→3200m) 설계비 5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조기 완공을 위한 보상 및 착공 사업비 66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지역 숙원사업인 서남권 거점공항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지난 8월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 체결의 후속절차로서 의미가 크다.

여기에 지난 10월 기획재정부로부터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던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의 경우 철도기본계획 수립에 10억원을 확보, 88년만에 현대화를 재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호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 경전선 전철화는 일제강점기(1930년) 이후 단선·비전철 구간으로 남은 탓에 호남지역 낙후의 상징으로 비쳐졌다. 전남도는 지역균형발전, 동

서교류 활성화 등 논리를 개발해 지속적으로 설득 노력을 기울여 결실을 맺었다.

남해안철도(목포-보성)와 광주-완도간(1단계) 고속도로 사업도 각각 1000억 원과 1138억 원이 증액돼 국가 기간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밖에 벌교-주암 3공구 계속사업 35억 원과 ▲동면-주암 ▲압해-송공 ▲북평-북일 ▲경전선 전철화(진주-광양) 4개 사업에 67억원을 내년도 신규 착공 사업비로 확보했다.

또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458억 원을 추가 확보해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 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반면, 서남해안 관광도로(완도-고흥),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압해-화원, 화태-백야, 여수-남해), 전라선 고속철도 등은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최원일 기자 cki@

해양기후 호흡기질환, 면역강화	해수 재활운동, 혈액순환
갯벌 근골격계 이완, 피부질환	해조류 면역강화, 피부질환

완도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 힐링하세요!

청정한 기후환경과 최고 품질의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 최적지입니다.

완도군에서는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여 해양헬스케어센터, 해양병원, 치유공원 등 공공시설과 해양리조트, 바이오기업 등의 민자시설이 복합된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